

'마지막 보루' 의대교수들 사직·휴진 확산

“물리적·체력적 한계...더는 못 버텨” “정부 실질 조정안 없어 최후수단” “필수의료패키지·의료생태계 우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 움직임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리적·체력적 한계,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한 실망,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과 의료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두 달 넘게 병원 진료 전반의 업무를 도맡고 있어 피로도가 극에 달한 데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수술·진료 차질도 빚어지고 있어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빅5’ 병원의 A 교수는 “남은 인력을 쥐어 짜 중증 환자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만 해도 100시간 정도 일했다”면서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통증의학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마취과가 열어주는 수술방이 부족해 수술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면서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의정 갈등 조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사직과 휴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을 두고 “실질적인 조정안이 아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B 교수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1000~2000명 사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인데, 의료계가 아닌 의대 증원을 지지했다가 급격한 인원 증가로 교육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판단한 일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 뿐”이라면서

“필수의료패키지도 그대로여서 (정부)가 발도 물리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25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전체 40명(위원장 제외) 6개 부처 관계자 20명·수요자 단체 5명·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공급자 단체는 10명뿐이어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의료개혁 특위는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다양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의료계는 의사 수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해 검증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가 주체가 돼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며 “직접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 정부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실질적인 필수의료 살리기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도 의대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려는 요인 중 하나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공정 보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인력 확충 정책 안에 담겨 있다.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원인인 일은 고되고 힘든 데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소송 부담은 큰 현재 의료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노태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

이지만 복미, 유류는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기피의 주원인인 고질적인 저수가의 근본적인 원인인 수가 의사결정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사직 전공의는 “성인과 달리 소아진료는 장시간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수가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가는 평균 의료원가의 70%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 병원은 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수가(급여)로 보는 손해를 비급여 수입으로 메우고 있다. 수가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간정심)에서 결정되는데, 수가를 올리려는 측 8명(의약계 대표)과 내리려는 측 16명(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공익 대표 각 8명)이 의결해 결정하다 보니 수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가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태가 내달로 넘어가면 의사 인력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고, 병원들이 도미노 도산할 우려가 있어 의료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의대 교수들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의대생들은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를 고려할 때 대량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들은 복귀한다 하더라도 올해 수련 일수를 채울 수 없게 돼 돌아올 이유가 없어진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어서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 가량이 배출되지 못한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갈수록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빅5’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동안 겨우 버텨온 지방 사립대병원부터 도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들은 고질적인 저수가(낮은 의료비용) 체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의 대신 전공의의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1만2000원)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왔다.

“공무직 노동자 43%, 세전 월급 220만원도 못 받아”

43.1%, 평균 근속연수 7.4년, 월급은 220만원 미만

공무직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 급여로 22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직 노동자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약 30만명)과 기간제(약 20만1000명) 근로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과 처우 면에서 차별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 11일~29일 동안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공무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총 8364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1%는 월임금 220만원(세전)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7.4년이다. 36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나를 공무 수행 노동자로 존중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6%”, “나를 동등한 조직 구성원으로 대우해준다고 답한 응답률은 24.2%에 그쳤다. 또 승진이나 승급, 포상기회가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3.3%에 불과했다.

약성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3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59.9%가 약성민원 해결 시스템이 없다고 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 8000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조사”라며 “이 조사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현실과 그로 인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공무직 노동자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비기자



산재 사망 건설노동자 살피미 하는 민주노총 사망 건설노동자 위령제에서 현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적관 앞에서 열린 산재

렌터카에 중학생 2명 감금 중고사기 강요한 10대들

렌터카에 중학생 2명을 감금, 중고사기 강요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군 등 10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3일 인천 일대에서 B군 등 10대 중학생 2명을 렌터카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고교생이었고, 나머지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군 등에게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훔쳐 오라고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친구는 “형들이 차에 강제로 태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의 휴대전화와 발신 위치를 추적해 A군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결과 B군 등은 범행을 강요당해 실제로 중고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B군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시스



나주경찰,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진행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23일 나주시 빛가람동 빛가람초등학교 앞에서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경찰, 지역사회 범죄 예방 위해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 위촉

담양경찰서(서장 권현오)는 수사경찰 추진 정책에 대한 홍보 및 피해자 보호 연계 등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을 위촉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남부소방, 2024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2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무안소방,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관서장 전통사찰 방문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23일 불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무안군 무안읍에 위치한 전통 사찰 역사사를 방문하였다.

무안=이성기기자



광양소방, 유관기관 합동 산악인명구조훈련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욱)는 23일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 중 한곳인 광양읍 사곡리 점동마을 인근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악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재본부



진도소방,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9일 진행된 제13회 전남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에서 진도소방서 대표로 출전한 ‘진심스’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